

7. 26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 해설 (A책형)

해설 : 이준모 교수

1.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 과정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 간 경계와 기능 간 경계가 점점 명확해진다.
- ② 조직 규모가 줄어들고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 ③ 중간관리층 규모가 축소되고 행정능도가 낮아진다.
- ④ 분권화를 촉진시키지만 집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1. 정답 ①

해설 ① 전자정부는 고객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추구한다. 직무와 기능 간 경계가 명확한 전통적인 구조로는 이러한 고객별 맞춤서비스를 달성하기 곤란하다.

- ② 고객별 맞춤서비스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관련되며, 관련 기능들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완결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직적 관료제보다는 수평적인 평면조직이나 네트워크조직이 바람직하다.
- ③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을 관리하므로 중간관리자의 규모는 축소되며,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층의 규모와 권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직접인력 대비 간접인력으로 측정되는 행정능도는 낮아질 것이다.
- ④ 전자정부는 일반적으로 분권화와 관련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통제의 용이성과 통솔범위의 확대는 집권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

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 ㉣ 엘리스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2. 정답 ②

해설 ㉠ 점증모형은 기존의 것을 기반으로 약간 향상된 정책을 추구하는 점진적인 정책결정모형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 ㉡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만족모형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탐색한다.
- ㉢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정해진 고차원의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어하고 환류하면서 적응적으로 의사를 결정으로, 고차원적인 목표가 사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변수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현상유지 성향)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비목적적 적응시스템이다.
- ㉣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다. 엘리스모형은 쿠바미사일위기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적 대응을 연구(1971)한 이론으로, 조직의 응집성을 기준으로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을 유형별로 분류한 모형이다.

3. 조직구조 및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화가 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공식화는 자원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 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 ③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하며,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④ 집권화는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3. 정답 ③

해설 ① 공식화 정도가 높고 수직적 분화(고층구조)가 심한 것은 관료제이다.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낮고 수직적 분화가 적은 저층구조의 특징으로 지닌다.

- ②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 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은 집권화이다.
- ③ 복잡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며,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산 등으로 구성된다.
- ④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공식화이다.

4. 네트워크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 ②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 ③ 네트워크 기관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④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4. 정답 ①

해설 ① 네트워크조직은 모호한 조직경계로 인하여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이 약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곤란하므로 기회주의적 행동이 야기된다.

- ② 네트워크조직은 필요에 따라 흩어지고 뭉칠 수 있는 모듈조직이므로 업무처리에 있어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 ③, ④ 네트워크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독립적인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다방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 간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뢰 관계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5. 신제도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 ②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
- ③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④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5. 정답 ④

- 해설 ① 경로의존성이란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뜻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의 역사적 발전은 과거의 발전 경로와 유사하며, 과거의 역사적 발전은 현재의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②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통해 인간행위를 연구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경제학, 정치학, 조직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발달하였다.
- ③ 행태주의는 역사적 맥락이나 구조적 제약이 인간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간과하였다. 이에 따라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변수를 통해 인간 행태를 설명함으로써 행태주의를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 ④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신제도주의이다.

6.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 ㉡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 ㉢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 ㉣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 ㉤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6. 정답 ④

- 해설 ㉠ 비배제성이란 일단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주체라고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한다.
- ㉡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그 공급의 결정과 생산의 집행을 정부가 모두 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비록 정부에 의해 공급이 결정되어도 그 집행(생산)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인 영역이 증대되고 있다. 민간위탁, 면허, 보조금 등이 이러한 영역에 속한다.
- ㉢ 건강보험은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이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국가 혹은 국가 소속의 공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정부역할은 시장이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영역이 설정된다. 공공재의 존재나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영역 즉, 시장실패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 전기와 고속도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요금재이다.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로, 천연 자원이나 희귀 동식물, 연안 어장, 목초지, 국립공원, 하천 등 관개시설, 산림자원, 정부예산 등 한정된 공유자원이 이에 속한다.

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 ②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을 들 수 있다.
- ③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 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 ④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보다는 진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7. 정답 ③

- 해설 ①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이고 회고적인 활동이다.
- ②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은 질적 기법이다. 양적 기법은 주로 집행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 연역적 방법이 활용되고, 질적 기법은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활용되며, 귀납적 방법이 활용된다.
- ③ 정책평가의 목적에는 정책과정의 법적·관리적·정치적 책임성의 확보,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성공 원칙의 발견 등과 같은 환류, 이론의 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등이 거론된다.
- ④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된 실험으로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같이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진실험보다는 준실험을 많이 활용한다.

8. 바흐라흐와 바라츠(P.Bachrach & M.S.Baratz)의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②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한다.
- ③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
- ④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한다.

8. 정답 ①

해설 ① 폭력이나 테러 등은 무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 ②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은 가장 세련되고 간접적인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 ③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하는 것은 권력을 활용한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 ④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편견을 동원한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9.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9. 정답 ②

해설 ①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정무직은 차관급 이상이다. 국가보훈처의 처장이 차관이므로 그 아래의 처장의 차관급이 아니다. 국가보훈처의 차장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사무를 전담처리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소속의 국가기관이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②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 ④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

10. 정답 ①

- 해설 ① 우리나라는 재산과세 중심이면서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보유과세 비중이 낮고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국은 30%, 일본은 20% 대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보유 과세 비중이 3.5%에 불과하다.
- ②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이다.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은 재정자립도이다.
 - ③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은 재정자립도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재원이 지방교부세이고,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다.

11.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11. 정답 ②

- 해설 ① 신공공관리론의 작동원리가 가격과 경쟁이라면 뉴거버넌스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즉, 사회적 자본을 작동원리로 한다.
- ② 뉴거버넌스 다양한 세력 간의 연합, 협상, 타협 등과 같은 정치적 과정을 중시한다.
 - ③, ④ 뉴거버넌스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한다. 즉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 정부 독점성을 부인한다.

12. 정책 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정책 - 부실기업 구조조정 ㉡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12. 정답 ④

해설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규제정책이다.

㉡ 노령연금제도는 재분배정책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배분정책이다.

13.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13. 정답 ①

해설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② 경력 중심의 승진은 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 구성원의 무사안일을 초래하므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전직과 전보와 같은 부서 간 수평적 인사교류는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부처 간 할거주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전보와 전직은 업무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강임이란 공무원을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는 처분이다.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임용권자에 의해 강임될 수 있다.

14. 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는 공식적 행정통제 방법이다.

② 공금 횡령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③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4. 정답 ②

해설 ① 계층제는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 간 지휘·명령복종 또는 단일의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는 공식적 통제방법이다.

② 공금 횡령은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과 같이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기형 부패에 해당된다. 거래형 부패는 뇌물의 수수와 같이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부패를 말한다.

③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국민감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 ③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15. 정답 ③

해설 ①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

-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시행되고,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그러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다.

16.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16. 정답 ③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 ③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17.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분석을 시행한다.
- ④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7.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은 타당성 조사이다.

18.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예비비 편성
- ② 추가경정예산
- ③ 특별회계 운용
-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8. 정답 ③

- 해설 ①, ②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은 사용목적, 사용금액 및 사용기간에 명확한 한계를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금액, 용도, 시기의 준수를 강조한다. 예비비의 편성과 추가경정예산은 금액 한정성 원칙(초과지출 금지)의 예외이다.
- ③ 특별회계의 운용은 일반회계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계리되므로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고, 용도가 특정되므로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④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용도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19.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 ②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③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 ④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19. 정답 ①

- 해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은 조세수입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③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하다. 다만,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자금을 잠식하지 않고 적립하거나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구분된다.
- ④ 예산은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하지만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

20.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 개념이다.
- ②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③ 행정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 ④ 롤스(J. 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 정답 ④

- 해설 ① 공익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 간 조정과 타협에 의한 경험적 산물로 보는 다원주의, 공리주의, 현실주의 및 개인주의 관점으로, 점증주의 모형과 관련된다.
- ②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공익 과정설이다.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선험적 이익으로 본다.

- ③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제기된 신행정학에서 강조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 ④ 롤스(J. Rawls) 정의론에서 제시된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타인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